

08

문화 · 통신 · 미래

재난사고 · 학교/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(☎ 044-203-2764)

- 재난사고, 학교폭력,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합니다.

(예술치유) 상담학,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,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

- 전문 예술치료사(미술, 음악, 무용 등)를 통한 1: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(10명 내외)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지원조건,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.



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(☎ 044-203-3156)

■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.

-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(등록·신고 체육시설업)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
* 등록(3종)·신고(14종) 체육시설업 현황 : 56,124개소(2013년 기준)

-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,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.

- 안전망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.8m(설면으로부터 1.5m 이상) 이상, 안전매트 두께는 50mm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.

- 슬로프길이 1.5km 이상인 경우 구조요원을 2명→3명으로, 리프트승차장 보조요원을 1명→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.

-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수영장 탁도기준을 2.8NTU→1.5NTU로 강화하고 중금속(비소, 수은, 알루미늄)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

■ 공포·시행일 : 2014.12.22.(시행 공포 후 6개월)

■ 주요내용

- ①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 의무화,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
- ② 스키장 안전 강화
 - 안전망의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.8m 이상(설면으로부터 1.5m 이상)
 - 스키구조요원 증원(2명→3명) 배치(슬로프 길이 1.5km 이상 시)
 -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증원(1명→2명) 배치
- ③ 수영장 안전위생기준 개선
 -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 강화(2.8NTU→1.5NTU)
 - 중금속 기준 마련(비소 0.05mg/l이하, 수은 0.007mg/l 이하, 알루미늄 0.5mg/l 이하)

■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(☎ 044-203-3153)

-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.
 - 스포츠 분야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조합을 결성,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기존의 스포츠산업 용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‘창의성’, ‘수익성’, ‘성장 가능성’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용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
 - 스포츠산업펀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벤처·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스포츠산업펀드 조성

- 목적 :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·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 통해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 투자 및 발전 촉진
- 투자내용 : 정부주도형 투자조합
 - *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→ 자펀드(투자조합) 조성·운용
- 펀드 결성 목표액 : 총 400억 이상
 -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출자 : 200억원(문체부→한국벤처투자(주)→투자조합)
 - 민간·기관투자자 출자 : 200억 이상(투자자→투자조합)
- 투자대상 : 스포츠산업 분야의 창업자·중소기업 등
 - 스포츠 용품, 스포츠 시설 및 설비, 스포츠 서비스, 스포츠 용·복합 분야 기업 및 스포츠 이벤트 등



태권도원 관광자원화

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(☎ 044-203-3165)

- (태권도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) 게임·드라마·영화 등 태권도원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하여 제작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국내 및 해외사범과 연계하여 한국어·영어·중국어·일어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 - 콘텐츠 스토리를 통해 태권도원을 홍보하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.
- (태권도 공동브랜드 개발) 태권도 단체 간 활용협약을 체결하고, 단일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상표권 활용 및 휘장사업 등 신(新) 시장 창출할 계획입니다.
 - 국기원 주관 세계 무도종합대회 등 참가선수 용품(도복 등) 부착시킬 계획입니다.
- (무주 관광자원과 연계된 태권도 통합관광권 시행) 태권도원과 연계된 안국사 템플스테이, 반딧불 축제, 무주군 체험농장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하여 일반인들이 통합관광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〈계절·지역 연계 가능 축제〉

• 구천동철쭉제(봄), 반딧불축제(여름), 덕유산단풍축제(가을), 남대천 얼음 축제(겨울)과 연계

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(☎ 044-203-2816)

-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됩니다.
 - 종전에 1개 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‘창조관광육성펀드’를 조성·운영하여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.
 - 이를 위하여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(주)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하여, 관광기금 1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.
 - 또한 민간투자자들에게 유망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‘창조관광사업’을 지정 제도로 정비하고, 종전의 ‘창조관광사업’을 2단계로 개편합니다.
 - (1단계 : 예비 창조관광사업 발굴·육성) 먼저, 참신하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는 ‘예비 창조관광사업’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게 됩니다.
 - (2단계 : 창조관광사업 지정)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중 유망 기업은 ‘창조관광사업’으로 지정받아 ‘창조관광육성펀드’의 우선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한편,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,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중소 관광사업체가 ‘창조관광사업’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(www.venture-visitkorea.com) : 추후 개편 예정

2015년 창조관광사업 추진계획

■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계획

- 공모 기간 : '15. 2월 중(예비창조관광사업) * 창조관광사업 지정은 추후 공고 예정
- 공모 대상 / 선정(지정) 규모
 - (예비 창조관광사업)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/ 40개 사업체
 - (창조관광사업) 유망 예비 창조관광사업 및 중소 관광사업체 / 제한 없음
- 지원 내역
 - (예비 창조관광사업) 사업화 지원 * 사업 당 평균 3천만 원
 - (창조관광사업) 창조관광육성펀드의 우선 투자 대상 및 정부 시상
- 사업 예산 : 총 154억원(예비창조관광사업 24억원/ 창조관광육성펀드 130억원)

■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·운용

- 조성규모 : '15~'19년까지, 총 1,000억/ 관광기금 500억, 민간 500억
 - * '15년 제1호 펀드 출시 총 260억/ 관광기금 130억, 민간 130억
- 투자대상 : 중소 벤처기업(콘텐츠, 프로젝트)
 - * 주목적투자비율 : 관광산업 60%(창조기업 20~30%), 기타분야 벤처기업
- 출자비율 : 정부와 민간 출자비율 50:50
- 존속기간 : 결성일로부터 8년 (2년 연장 가능)
- 투자기간 :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

장애인·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(☎ 044-203-2816)

- 장애인,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2015 열린 관광지」 사업이 새롭게 실시됩니다.
-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,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그 해의 1호 ~ 5호의 「열린 관광지」로 선정되는 명예가 주어집니다.
-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,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.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: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

2015년 열린 관광지 사업 추진계획

- 「2015년 열린 관광지」사업 추진계획
 - (사업목적)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 보장 및 고령사회 등 미래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
 - (공모대상 및 규모/ 지원액)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/개소 당 2억 원 한도 내
 - (지원내용) 장애인, 노인 관광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개보수, 안내체계 개선, 종사자 교육 등
 - (사업추진기관) 한국관광공사
 - (추진 일정) 접수('14.12.29 - '15.1.30), 심사('15.2.10 - '15.3.15), 개보수 지원 및 컨설팅('15.4월-12월), 1호- 5호 열린관광지 현판식 및 2016 열린관광지 공모('15.12월)



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(☎ 044-203-2834)

-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되며, 평가의 내실화·일관성 확보를 통해,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.
 -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, 등급별 기준,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 - 또한,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.
- ☞ (참고) 등급별 평가기준, 평가방식,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「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(문체부 고시)」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의 '자료마당-법령자료-입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,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(☎ 044-203-2841)

■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,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일반야영장업을 신설,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·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또한,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www.gocamping.or.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궁 ·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

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(☎ 042-481-4909)

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를 50% 감면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혜택이 부재하였으나, 2015년 1월 29일부터 4대궁 · 종묘, 조선왕릉 등의 관람료를 50%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대상문화재 : 4대궁(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) · 종묘, 조선왕릉, 유적(여주 영릉)

☞ 문화재청 홈페이지>새소식>보도/해명>보도자료>궁 ·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% 감면

궁 · 능원과 유적 소재지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

- 추진배경 : 4대궁 · 종묘 등 주변 지역주민은 많은 관광객 ·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일상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필요
- 주요내용 : 궁 · 능원과 유적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50% 감면
- 시 행 일 : 2015년 1월 29일



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·운영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(☎ 02-2110-1415)

- 2015년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'14.12.23일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(MMS) 시범서비스를 허용 하였습니다.
- 지상파다채널방송이란,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1개 채널을 더 전송하는 방식입니다.
-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,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
-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☞ (참고) 방통위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‘방통위, EBS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허용 키로’

■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

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(☎ 02-2110-1553)

-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(알뜰폰 포함)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**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**됩니다('15.4)
-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,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(알뜰폰 포함)에게 **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**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방통위는 **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**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에 대한 **실태 점검**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청소년이 휴대폰을 가입할 때 유해매체물 및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으로써, 음란사이트 등 **성인용 콘텐츠로부터 보호** 할 수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.

☎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법령현황

2015년도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항목

- 추진배경 :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
- 주요내용
 - ① 이통사(알뜰폰 포함)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,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물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
 - ② 방통위는 차단 수단 제공 실태 점검 가능
- 시행일 : 2015년 4월

■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

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(☎ 02-2110-1553)

- 웹하드·P2P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(’15.4)
 -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·변경·우회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.
 - 방통위는 운영·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
 - 음란물의 주요 유통 창구인 웹하드에서 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으로 음란물 유통 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마련될 전망입니다.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법령현황

2015년도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항목

- 추진배경 : 웹하드·P2P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제 미흡
- 주요내용
 - ① 웹하드·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(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되고, 이의 제거·변경·우회를 금지(위반시 2년 이하 징역·1억 이하 벌금)
 - ②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·보관
 - ③ 방통위는 실태를 점검하거나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
- 시행일 : 2015년 4월



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(☎ 02-2110-1274)

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'15년부터 **혁신형 중소기업***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%까지 지원해 드립니다.
 - 기업당 지원규모는 **방송광고 제작비의 50%** 범위내에서 **TV광고는 최대 5,000만원**까지, **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**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* 벤처 · 이노비즈 · 메인비즈기업 / 우수 녹색 경영 · 녹색인증 중소기업 /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/ IP (지식재산) 스타기업 등
-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은 기존 **방송광고 송출비 할인(최대 70% 할인)**지원과 연계하여 제작비와 송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
 -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,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**방송광고의 진입장벽을 낮춤**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·운영

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(☎ 02-2110-1297)

■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·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'15년 상반기에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권역 시청자에게도 **미디어 교육 등 시청자 지원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
-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부산,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서울 성북지역에 설치·운영합니다.

*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지역 : 부산('05), 광주('07), 인천·대전·강원('14)

- 서울지역 1,000만 시청자에게 **미디어교육, 방송제작 장비 지원, 등의 서비스**를 제공하는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,
 -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창작 활동이 증대되고,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, 분리발주 의무대상

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(☎ 02-2110-1833)

- '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**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**됩니다.
 -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지만 '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도 분리발주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
 - 이에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 등록 활성화, 상용SW 제값주기, 발주자의 분리발주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**조달구매를 통해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**입니다.
-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증가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**사전 검토 제도가 의무화**됩니다.
 -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를 통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 할 경우, 발주의뢰 전에 **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** 받아야 합니다.



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

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(☎ 02-2110-1833)

- '15년 1월부터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 - 한시적으로 “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면 참여가 허용되었으나,
 - 이후부터는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더라도 유지 및 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.
- 중소기업청의 「중소기업 범위 기준」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(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)의 대상이 되는 「중소기업 범위」도 확대됩니다.
 -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(상기 근로자, 자본금 또는 매출액)을 매출액(3년 평균) 기준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되었고,
 -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되어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.

〈 (참고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('15.1월 시행) 〉

- 제3조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
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"평균매출액등"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
* (별표1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: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
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
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

■ 추진배경 :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(상기 근로자, 자본금 또는 매출액)을 매출액 (3년 평균)기준으로 단일화

■ 주요내용 :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변경

법상 적용기업 \ 적용시기	종 전(~'14.12월)	변 경('15.1월)
출판,영상,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-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	-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이 800억원 이하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)

■ 공개SW R&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

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팀 (☎ 02-2110-1805)

■ 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**공개SW 개발과제*** 참여시 **민간부담금** 및 **수행기업 납부 기술료****를 **면제**할 계획입니다.

* **공개SW 개발과제** :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SW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 전 과정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으로 '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40조 공개소프트웨어 특례조항'에 따라 과제 추진

** **기술료** : 정부 R&D 과제를 수행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정부에 출연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

- 지금까지 공개SW 기술개발 과제 수행 기관은 일반 과제와 동일하게 민간부담금(총 사업비의 25% 이상)과 기술료(정부 출연금의 10% 이상)를 부담·납부하여 왔습니다.
-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**관련 규정*이 개정되어 공개SW 연구개발과제는 민간부담금과 기술료가 면제**됩니다.

*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부속훈령

-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SW 개발 방식과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글로벌화 하고, 우수 결과물의 지속적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뉴스·알림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(공고 제2014-501~505)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
2015년도 공개SW 개발과제 관련 규정 변경 내용

- 추진배경 : 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
- 개정내용
 - ① 민간부담금 면제(총사업비의 25% 이상 → 면제)
 - ② 기술료 면제(정부출연금의 10% 이상 → 면제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

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(☎ 02-2110-1722)

■ '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, 스타트업·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.

-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

- 개방형 IoT 플랫폼의 소스를 공개하여 개발자들의 사물인터넷 제품, 서비스 개발이 쉬워집니다.

- 유망 사물인터넷 분야(스마트시티, 헬스케어)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조성하고, 이용자 중심형 리빙랩을 설치하여 신서비스를 발굴합니다.

- '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'과 '사물인터넷 실증센터'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실증합니다.

- 스타트업,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사물인터넷 우수 시제품을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리빙랩* 실증공간이 조성됩니다.

* Living Lab :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, 실제 생활 현장(real-life setting)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현장 실험실이자 베타 테스트베드

- IoT DIY 환경을 확산하여 누구나 사물인터넷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누구나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구현시켜볼 수 있는 DIY 오픈 랩은 현재 수도권(강남, 송도, 용인)에 3개소 설치되어 있지만, '15년에는 지역에 2개를 추가하여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

- 찾아가는 DIY 체험교실,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이 사물인터넷을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.

- IoT 혁신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, 스타트업, 중소기업 등이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해집니다.
 -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**창조경제 혁신센터**, **무한상상실** 등과 협력을 확대합니다.
 - IoT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여 더 많은 **사물인터넷 스타트업**이 **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**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‘기업가양성 과정’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.
 - 사물인터넷 글로벌 협의체’의 IoT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**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,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**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.
 - 우리나라의 유망 **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도록** 전문 전시회, 해외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

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

- 추진배경 :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사물인터넷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 및 IoT 생태계 구축
 - ②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서비스 발굴·실증
 - ③ IoT DIY 환경 확산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
 - ④ IoT 혁신센터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 지원
- 시행일 : 2015년~

■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

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(☎ 02-2110-2731)

■ 대학별 연구환경에 적합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을 개선합니다.

- 그동안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*이었으나, '15년부터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할 계획입니다.

* A등급 20%, B등급 15%, C등급 10%, D등급 5%

- 또한, 대학의 연구비 관리 책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접비 가·감율을 정비하였습니다.
 - 국가R&D사업 참여제한에 따른 최대감율을 -2.8%p에서 -5.0%p까지 확대하고,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간접비를 $\pm 2\%$ 범위에서 차등 가·감할 계획입니다.

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

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(☎ 02-2110-2856)

- 정보통신·정보통신 융합분야 기업, 학생, 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「ICT 학점이수 인턴제」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본 제도는 지난 2월 시행된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학점이수인턴제’ 조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,
 - ICT 및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R&D/서비스 개발, 특화 분야, 근무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기업에 지원,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
- 제도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·대학은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, 참여 기업 및 대학 등에는 근무 현장 구축, 전담 인력 배정, 사전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☞ 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2015년 신학기부터 학점이수인턴제 시행

2015년도 ICT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

- 추진배경 : 「ICT 특별법」, 대통령 지시사항('14.4.10, 국가과학자문위), 「공과대학 혁신방안」 등에 반영된 학점이수 인턴제를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와 관련한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·벤처기업, 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R&D, 서비스 개발 등에 참여하는 「ICT 학점이수 인턴제」를 시행('15년 150여명 규모)
 - ② 기업에서 발굴한 R&D,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 등이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
 - ③ 제도 참여에 지원한 기업 및 대학 중 적정 기업 및 대학에 대해 시설 구축, 기자재, 지도 인력 배치 등을 지원(시행령 제15조)
- 시행일 : 2013년 3월(1학기)

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

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(☎ 02-2110-2958)

■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인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로 공사업자의 행정적·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.

-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공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.
 -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시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 등으로 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.

※ “손톱 밑 가시” 규제개선 과제 선정('14.3.20,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)

※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 효과 : 매년 총 12.8억원(공사협회 분석자료)

☞ (참고) 국화-의안정보시스템>처리(의안)법률안>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(권은희의원 등 10인)
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시행 >

■ 추진배경 :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·경제적 부담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

■ 주요내용

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제도 폐지

-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

■ 시행일 : 2015년 3월 예정(본회의 의결 : 2014.12.9)

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
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(☎ 02-2110-1947)

■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
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.(’15.4.16)

-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특히,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*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* 현재 인터넷발송 문자는 서비스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발신번호 조작이 용이함에 따라 스미싱, 문자폭력 등에 악용

- 또한,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, 번호 변작이 발생한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하여 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게 됩니다.

☎ (참고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발신번호 변작방지 등 통신사의 주요 조치 내용

■ 추진배경 :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

■ 주요내용

- ① 발신번호 변작방지, 국제전화 안내 등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
- ②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중지
- ③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

■ 시행일 : 2015년 4월 16일(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 등록은 ’15.10월까지)